

“당장 멈춰라” 광주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집단행동

정부 향해 “일본 대변하지 말라” “오염수 투기 금지하라”

기시다 총리·윤 대통령 담긴 대형 그림 찢는 상징 의식도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동시다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규탄 집단행동에 목소리를 보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권역별 동시다발 집단행동의 일환이다.

공동행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노동·교육·종교·농어민 25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주최측 추산 공동행동 회원 100여 명은 직접 쓴 손팻말을 들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손팻말에는 ‘일본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 당장 멈춰’, ‘오염수 위험 시민 건강 위협 거린다’,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하는 오염수 투기 멈춰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 금지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또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등 목소리 높여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지키지 못한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송준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대회사로 통해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도 한미·일이 합의했다며 최근 정상회담에서는 입도 뺏기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제 일을 안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광주시,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한 목소리로 오염수 방류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지자체부터 국제해법재단소 제소를 정부에 강력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회원들은 광주시청·국민의힘 광주시당 1.5km 거리를 행진, 시장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는 일장기와 합성한 국민의힘, 기시다 일본 총리, 윤 대통령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 의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바닷물로 희석한 뒤에도 남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대형 물탱크 1000기 이상에 보관돼 있다. 이미 양이 134만에 달해 수용 가능 용량의 98%에 도달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결정에 따라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변용일 기자

2학기부터 학폭 ‘선 전학 후 조치’...즉시분리 3→7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오는 2학기부터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전학을 먼저 가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이 같은 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12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시행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교고) 이상 1~9호로 구분된다.

개정된 지침은 가해 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가해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교육지원청)에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지침에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났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24시간 내)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 뜻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그간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 즉시 분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금요일에 분리할 경우 주말이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피·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해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개정된 이번 지침에 담기지 않았다.

예컨대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권을 주는 방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과 같이 집행정지가 인용돼 강제 전학이 중단될 경우 피해 학생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 총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당초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8곳으로 늘어났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사안이 발생한 단위 학교는 단 한 차례 신청만으로 센터에서 ▲사안처리 컨설팅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료 ▲관계 회복 프로그램 ▲법률 대응 지원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이번 주 ‘우산 항시 소지’...내내 전국 대부분 비

29~30일 시간당 30mm 강한 비
 31~9월1일 남부지방 중심 강수

이번 주(28일~9월3일) 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하고 산발적인 비가 내리다, 중반으로 들어서며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후 정체전선 등이 형성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7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까지 저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내리고, 성질이 다른 기단이 우리나라 남부 지방 쪽에서 부딪쳐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9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이고 약한 강수가 길게 이어지겠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오늘(27일) 약한 비구름대들이 남부지방 일부 지역과 동해안 쪽에 영향을 주고, 28일이 되면 서쪽에서 접근해 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권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 30~80mm(많은 곳 150mm 이상) ▲강원영서중·북부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강원영서남부, 강원영동 20~60mm ▲충남서해안, 충남북부내륙 30~80mm ▲세종·대전·충남남부내륙, 충북 20~60mm ▲전남동부남해안, 지리산부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다.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10~60mm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 지리산부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대구·경북(북부내륙 제외), 부산·울산·경남중·동부 20~60mm ▲울릉도·독도 10~40mm ▲제주도 10~60mm(많은 곳 80mm 이상)다.

이후 29일 오후부터 저기압에 동반된 체계적인 강수가 시작돼 30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후 30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31일과 9월1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된다.

기동취재본부

어머님들장흥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